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9년 01월 24일

| 금주 이슈 |

- I.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5
- II.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11
- III.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19
- IV.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 27

이슈브리프

2019. 1. 24

- I.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5
- II.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11
- III.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19
- IV.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과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 27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주의 이슈

❖ 금주(1월 넷째 주)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등 4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제2편에서는 역대 최대 상승폭의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짚어보았습니다. 제3편에서는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분석하여 향후 당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자동차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제1편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_이윤경 연구원

체육계 미투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과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의 심각성이 커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선수생명을 걸고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2016년 미국 체조계 사례를 거울삼아 그에 준하는 관련자 처벌 및 책임자 사퇴, 실질적이고 철저한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함

❖ 제2편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_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역대 최대 상승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贊反논쟁이 격화되고 있음. 주택공시가격의 급속한 인상은 超고가 주택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서민에게도 상당한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보유세 폭탄, 국민증세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농후함. 향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공시지가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제3편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_노명순 연구위원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줌. 장기적인 교육비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정책 일관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남. 향후 당의 교육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제4편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_장경수 선임연구원

현행 자동차세는 52년전 만들어진 과세표준에 의해 값비싼 수입차보다 저가의 국산차가 오히려 더 많이 내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보다 일반승용차가 더 많이 내는 등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과세기준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 중심으로 세분화하되, 환경적인 기준(연비, CO²배출량 등)까지 복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019. 1. 24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선 동

I.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체육계 미투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과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의 심각성이 커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선수생명을 걸고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2016년 미국 체조계 사례를 거울삼아 그에 준하는 관련자 처벌 및 책임자 사퇴, 실질적이고 철저한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함.

1. 사건개요

□ 민낯을 드러낸 2019 체육계 성폭력

○ 체육계 선수들 성폭행 피해 폭로, ‘체육계 미투’로 확대

- 지난 8일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시작으로, 신유용 前유도선수(1.4), 前고등학교 정구선수(1.16), 前태권도 선수(1.16), 前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등이 피해 사실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로 확대
- ‘젊은빙상인연대’ 기자회견(1.21)¹⁾에서 빙상계 피해자 6명 추가 폭로
- 이후 김미성 前양궁 선수(1.21), 최지나 세팍타크로 선수(1.21), 축구계 등 다양한 종목에서 피해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남

1) 젊은빙상인연대는 ‘대한민국 빙상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빙상계 성폭력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 정부의 빠르고도 과감한 진수조사, 한국체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총사퇴 요구

2. 정부대응 및 문제점

□ 되풀이되는 정부대책

○ 선수들의 피해 사실이 밝혀진 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냄

※ 문체부 대책 발표 (1.9), 대한체육회장 사과 및 방지대책 발표 (1.16), 문체부 후속조치 발표 (1.16), 3개 부처(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공동대응발표 (1.17), 국가인권위 인권실태조사계획 발표(1.22)

○ 그러나 이미 10년 전 발생했던 체육계 성폭력 사건 대책 발표와 흡사

- 200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8.8% 폭력경험, 63% 성폭력 피해 경험, 강간 피해사례 12건 등이 확인되었으니 이후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사건사고 반복

<표 1> 10년 전과 같은 정부대책 발표 내용

2008년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2019 정부대책 발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및 경기장 접근 금지 등 격리 ·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 및 징계내용 포함 ·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원천 차단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확충 ·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 상시 합숙훈련 개선 ·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지도자·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년1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 처벌강화) · 성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 인권관리관 배치 ·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 · 국가대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 참여를 적극 검토
---	---

□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문제점

○ 피해사실을 밝힐 수 없는 체육계의 구조

- 코치가 선수에 대한 선수선발, 대회 출전 여부 등 막대한 영향력을 넘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체육계의 구조상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움

○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와의 미분리

- 유사사건 발생해도 처벌 수위 낮고 경징계 수준

※ 심석희 선수 폭행 가해자 조재범 코치는 2011년 승부조작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음. 이후 원칙상 대표팀 코치 선발이 불가함에도 2014년 빙상연맹이 규정 어기고 코치로 선발

- 피해 신고 받는 주체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추행·성폭행·구타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복직과 재취업 빈번
- ※ 지난해 9월 선수단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계약해지 당한 하금진 前경주 한수원 감독은 16세 이하 (U-16)여자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해임

○ 사건을 방임, 방조한 대한체육회

- 연맹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대한체육회는 다시 연맹에게 사건해결 지시
- 유명무실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비위 현황 전수조사 자료²⁾에 따르면 2017년 1월 신설 후 2018년 9월까지 성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4건

3. 해외사례

□ 미국 체조계 미투 사건

- 미국 체조국가대표팀 주치의(래리 나사르)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약 30년간 300여 명의 여자 체조선수를 성추행 및 성폭행
- 이에 美 법원은 가해자에게 360년 형을 선고
- 사건 발생 후,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위원장, USOC 회장, USOC 경기향상 책임자 및 미국체조협회 전직·현직 회장³⁾ 등 책임자 대거 사퇴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제공

- 美 법원은 미국체조협회에게 피해자 보상금 1억5천만 달러 배상 선고, 결국 미국체조협회 파산신청
 - 가해자가 일했던 미시간주립대는 5억 달러를 내고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들은 미국체조협회와 USOC를 상대로 한 수백 건의 소송 진행 중
- 이 사건은 미국 체육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美 체조계는 이를 계기로 가해자 엄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 책임자 사퇴 등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함

4. 시사점

□ 강력한 가해자 처벌 및 책임자 사퇴

- 미국 체조계는 비슷한 사례에서 강력한 처벌과 책임자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점차 회복,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대한체육회 회장은 취임 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이야기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면피용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 전명규 교수의 경우 특정 선수 밀어주기, 성적 조작, 특정사 유니폼 교체, 심석희 기자회견 취소 압박, 선수들에게 조재범 코치 탄원서

3) 취임 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 등장으로 사흘 만에 자진사퇴

작성지시, 피해 선수들 소송 철회 압박, 텔레그램 사용 지시 등 수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대해 조속한 진상조사 필요

□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체육계 자정의 마지막 기회,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

- 더 이상 피해자가 선수 생명을 걸고 피해사실을 밝히며 전면에서 나서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함
- 각 부처가 발표한 대책이 사건 발생 때 마다 반복되었던 대책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바, 진정한 사태수습과 재발방지가 가능한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

○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미투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로 처벌 근거와 제도 마련

□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더 이상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성적에 매몰되어 선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 선수와 코치, 국민 모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응원하는 인식개선

○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훈련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작성: 이윤경 연구원 ☎ 02-6288-0526]

II.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최저임금 정책 공포 사례

역대 최대 상승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贊反논쟁이 격화되고 있음. 주택공시가격의 급속한 인상은 超고가 주택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서민에게도 상당한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보유세 폭탄, 국민증세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농후함. 향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공시지가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1. 표준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발표

□ 역대 최대 상승폭의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발표(1.7)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은 평균 20.83%로 지난해(7.92%)의 3배에 해당

- 강남구(42.8%),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7%)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인상

○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0.23%로 동 제도도입(2005) 이후 처음으로 2자릿수 기록(2018.12.19.)

※ 정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23)를 거쳐 1.25(금)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 이후, 1개월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20 확정 예정. 이후 4월 중순경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공시가격과 함께 발표하게 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22만가구를 의미하며, 전국 단독주택(약 418만 가구) 개별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

2.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에 대한 찬성·동조 의견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인상 기초를 유지” 할 것이며, “특히 高價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에 맞춰 현실화할 것”
- (청와대) “집값 상승분에 맞춰 공시가격이 인상되어야 함” (김수현 정책실장)
- (경실련) “단독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38%) 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7%)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85% 이상으로 정상화해야함”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에 대한 이견·반대 의견

- (서울지역 6개 자치구)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급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공시가격 재조사 및 공시가 하향 조정 건의(1.15)¹⁾
- (여연) “공시지가 폭탄은 문재인 정부 식 서민·중산층 거위털 뽑기” (김선동 원장, 1.21)
- (더불어민주당) “집값 급등지역·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현실화하되, 중저가 주택은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해야” (홍영표 원내대표, 1.22)

1)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서울시의 6개 자치구

3.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富者뿐 아니라 중산층,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세 부담

○ 종부세와 달리 공시지가 인상은 보편적 증세, 서민증세에 해당

○ 무엇보다, 재산세뿐 아니라, 증여세·상속세·취득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 과세부담에 더해 기초연금 수혜자격 탈락 등에 따른 서민·노령 층의 재정부담 급증 우려

※ 제주도에서 2년간(2016~2017) 주택공시가격 대폭인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의 42%가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 발생

<표 1> 주택공시가격 인상 관련 세제 목록(예시)

관련 세제	산출방식 등
재산세	(공시가격×60%)×누진세율(0.1~0.4%)
증여세, 상속세	(공시가격-공제액)×누진세율(10~50%)
취득세	공시가격×4%(3.16%)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 공시가격 반영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공제액)·85%·누진세율(0.5~3.2%)
지역건강보험료	(공시가격×60%)의 등급별 점수×189.7원
피부양자 자격	공시가격을 일부 반영
기초연금 자격	소득환산액 산정시 공시가격 기준

□ 일관성 없는 시세반영률

- 동일 혹은 인접지역임에도 발표된 예정공시가격의 평균상승률 격차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 없음
 - 예컨대, 압구정동이 108.8% 상승된 반면 인접한 신사동은 59.7%이었으며, 이태원동에 소재한 주택들의 경우 최저 51.5%, 최대 76.3%로 상당한 상승률 격차를 보임
- 實거래가 반영률이 일관적이지 않음으로써, 비슷한 시세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천차만별
 - 인접지역 내 동일가격수준에 거래된 2주택간 보유세가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격차
- 더욱이, 정부는 최근 6년간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
 -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법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8.24)

□ 보유세 급등(우려)에 따른 주택소유자 부담 증가, 관련 민원 급증

- 고정수입 없이 1주택이 쏠 재산인 은퇴가구의 보유세 급증에 따른 민생부담 증가

-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현행법상 상한선(50%(1주택자) ~200%(3주택자))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 서울지역 6개 자치구에서 주택공시가격 급속인상에 이의 제기
 -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 문의 폭주에 따라,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

□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의 정치논리 등에 따른 공정성·객관성 훼손 우려

-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업계에 공시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나친 개입 구설수²⁾
- 공시가격은 부동산정책의 기초 데이터이며, 따라서 정치논리와 독립된 일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산정에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1.20)

2) 언론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서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짐(1.4일자 주요 일간지)

4. 정책적 시사점

□ 부동산 기준가격의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間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이른바 부동산 기준가격의 정상화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
 -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間,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間 형평성을 맞추갈 필요성도 있는 실정

□ 제2의 최저임금 정책 공포 사례

- 하지만, ‘최저임금인상 공포’와 같이 급격한 밀어붙이기식 공시가격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과,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음
 - 주택공시가격의 급속인상 역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문제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공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

□ 국민증세의 신호탄

-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급속인상 추진은 중산층·서민에 대한 보유세 폭탄, 국민증세의 신호탄일 가능성
 - 외형적으로는 부동산투기억제, 집값안정, 부자를 표적으로 한 핀셋증세이지만, 결국 중산층·서민 전반의 보유세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정부·청와대의 공시지가 인상 드라이브에 제동(1.22)을 건 점은, 최근의 급속한 경기 악화 및 서민 물가 불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임

□ 공시지가 정상화의 점진적 추진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재검토, 공시가격의 (대국민)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 향후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적의 조절해 나갈 필요
- 현행 稅부담 상한제와 유사한 주택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 02-6288-0531]

Ⅲ.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심각하고 위협한 수준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고 위협한 수준임을 보여줌. 장기적인 교육비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정책 일관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남. 향후 당의 교육정책 기초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1999년부터 매년 교육·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및 태도,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초 13차(2018) 조사결과를 발표함

○ 조사 대상

- 13차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6일 ~ 9월 3일(4주)까지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 조사 내용

-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 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5(+2)문항

2. 주요 조사 결과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부정적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일관성(긍정 8.5%, 부정 65%), 장기적 비전(긍정 9%, 부정 62.2%),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긍정 11.9%, 부정 39.2%), 국민여론 반영(긍정 13.9%, 부정 41.3%)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

○ 학교교육에 대한 높은 불만족

- 전체 응답자의 조사결과, 초·중·고 교육을 ‘잘 하고 있다’ 11.4%에 불과하며, ‘잘 못하고 있다’ 35.5%, ‘보통’ 53.2%
-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불만족은 더 높게 나왔는데, ‘잘 하고 있다’ 9.5%, ‘보통’ 51.6%, ‘잘 못하고 있다’ 39%

○ 심각한 수준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4% ‘높다’ (매우 높다+높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75.8% ‘높다’고 응답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초 40.6%, 중 72.9%, 고 87.6%)

○ 돌봄과 안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

-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

위 정책으로 ‘은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15.1%,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12.8% 순으로 응답

- 한정된 국가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분야로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가 21.5%로 가장 높음

○ 교원의 다양성·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점수는 평균 2.84(5점 만점)로 높다고 할 수 없음
- 교육의 질을 위해 교원자격증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유입에 대한 국민적 갈증 확인함
 -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51.6%)가 찬성, 특히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동의(60.8%)
 -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56.2%)이 찬성, 초·중·고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보다 더 높은 비율(62.8%)로 찬성

○ 대학 진학 경쟁에 대한 전망

-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46.1%,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33.7%,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9.2%,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6.7%, ‘잘 모르겠다’ 4.5% 순으로 응답

○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여론 압도적

-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7.5%, ‘보통이다’ 32.7%,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0.0%
- 대학교수(4년제)가 학생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의견은 9.8%, ‘보통’ 44.4%, ‘못하고 있다’ 46.0%
-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 국민들은 2~3년 전과 비교해 사교육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응답자의 90%는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의견
 - ‘부담된다’(다소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88.4%이며,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초 88.9%, 중 90.2%, 고 94.9%)
-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심리적 불안 때문
 -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 26.6%,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 23.7%,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14.8%, ‘학교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위해’ 14.4% 순

○ 학벌사회에 대한 무력감 vs. 변화에 대한 갈망 공존

- ‘졸업장 유무로 인한 차별 정도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59.7%, ‘학벌주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것’ 59.9%, ‘대학 서열화가 큰 변화 없을 것’ 61.0%
- 초·중·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의 다양화’ 30.4%, ‘학벌 위주 사회체제의 개혁’ 29.7%

3. 시사점

○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

-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 65%, ‘장기적 비전 부재’ 62.2%,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평균 2.84(5점 만점),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다’ 84.4%, ‘학교교육을 잘하고 있다’ 11.4%, ‘대학이 인재양성을 잘하고 있다’ 7.5%, ‘교수가 학생을 잘 가르치고 있다’ 9.8%,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88.4% 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장기적인 교육비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일관성 결여 때문

- 지금 우리에게 국가비전, 사회비전, 그로부터 파생된 유기적인 교육비전이 있는가?

- 개별 교육정책은(특히 입시문제를 중심으로) 당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정권에 따라 장관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비전의 부재에 따른 결과
-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비전 아래 마련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 줄 수 있어야 함

○ 향후 당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 필요

- 학교라는 공간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비전
 - 조사결과를 보면, 지식을 연마하는 학습의 장소로 인식하던 학교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국민적 요구 부상하고 있음
 - 장소로서의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과 돌봄 중시, 기능적으로는 전통적 학습보다 도덕성, 사회성, 인성, 창의성 등 다양한 역량 향상 요구
 - 교사와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인 학교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비전
 - 학벌주의 사회풍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절망감이 높은 것과 동시에 학교가 변하려면 그 사회풍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안 필요
 - 글로벌 경쟁력으로 보면¹⁾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 불과한데, 소위 SKY로

1)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의 2018년 세계대학랭킹을 보면 칭화대학(중국) 45위, 베이징대학(중국) 57위, 저장대학(중국) 67위, 싱가포르 국립대학(싱가포르) 85위, 난양 공대(싱가포르) 96위다. 일본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에 100위 권 안에 들었다. 세계 100위 랭킹은 '넘사벽' 으로서 ARWU 지표 역사상 한국대학 중 어느 대학도 이에 포함된 적

불리는 대학을 정점으로 입시에 목을 때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명문대란 무엇인가, 좋은 인재란 무엇인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 필요한가, 학벌주의 해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함

- 교육개혁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함양

- 지금 우리교육은 초중고 학교에 대한 낮은 만족도나 대학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보면 보수의 이념인 탁월성과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시 vs. 수시 논란에서 보듯 좌파의 이념인 공정성과 민주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지금의 학교체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산업사회의 유물 수준, 기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교육계나 교육부에 의한 교육개혁 불가능,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사는 정치적 의미와는 별도로 보수적인 집단으로 그 내부로부터 개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학교개혁과 질적 성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결단과 압박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필요

[작성 : 노명순 연구위원 ☎ 02-6288-0525]

은 없다. 중국대학과 싱가포르대학의 세계 100위권 진입은 최근 몇 년 안에 이루어진 일로서 몰락하는 한국대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대학교는 9년째 101-150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최근 급성장하여 150-200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0위권 안의 한국대학은 단 두 군데이며 한국과학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카이스트는 201-300위권, 포스텍은 401-500위권이였다. 처참한 성적이다. 우리의 엘리트 대학들조차 글로벌 경쟁력이 형편없다(출처: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IV.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현행 자동차세는 52년전 만들어진 과세표준에 의해 값비싼 수입차보다 저가의 국산차가 오히려 더 많이 내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보다 일반승용차가 더 많이 내는 등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과세기준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 중심으로 세분화하되, 환경적인 기준(연비, CO²배출량 등)까지 복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 현행 자동차세의 형평성 논란

○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¹⁾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 제기

-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산승용차와 두세 배 비싼 수입승용차가 동일 배기량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수준의 자동차세 부담
- 이는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부과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

○ 과거에는 배기량이 클수록 비싼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의 기술 발달로 배기량 대비 엔진 성능이 우수하고 고가 차량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차량에 비해 가격 대비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사례 종종 발생

1) 「지방세법」 제127조

- 따라서 가격 기준으로 전환해서 동일한 배기량 차량이더라도 고가 차량에는 높은 세금을, 저가 차량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2. 자동차세의 구조와 성격

□ 자동차 세제 구조

- 현행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존재



[그림 1] 자동차 세제 구조

□ 자동차세의 성격

- 현행 자동차세는 법률적으로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실물자산의 보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 차량이 무거워 도로 파손 및 마모를 많이 할수록, 이산화탄소(CO²)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거나 고급 대형차일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여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지님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구매, 보유 및 이용단계마다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여 다양한 조세 부과
 - 구매단계(6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 보유단계(2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이용단계(4개): 유류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동차가 생활수단으로 보편화 되면서 사치재나 재산으로서의 성격은 많이 약화됨

3. 현행 자동차세의 문제점

-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1967년에 도입되어 현재의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 이전에는 배기량 크기와 차량 가격, 오염물질 배출량은 대체로 비례하고, 연비와는 반비례 관계 성립
 -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도 다운사이징²⁾, 터보기술³⁾ 등으로 앞서 성립된 관계가 불성립

<표 1> 현행 자동차세 과세표준⁴⁾

영업용 (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상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	18	19	24
비영업용 (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	140	200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2011년 개정)

- 현행 과세 기준에 따르면 벤츠 E300(1,991cc)은 현대차 쏘나타(1,999cc)보다 차량 가격이 3배 이상⁵⁾ 비싸지만, 배기량이 거의 동일해 자동차세는 두 차량 모두 약 40만원을 내고 있는 게 현실
 - 이로 인해 차량 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만이 높음
- 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非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
 - 고가의 전기차⁶⁾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0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⁷⁾

2) 엔진의 크기 및 차체의 무게를 줄이고 변속기의 효율을 높여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

3) 엔진 배기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공기압축기를 구동해 많은 공기를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엔진 출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

4) 과세표준에 근거한 금액에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30%를 추가로 더하고 연차경감율을 반영하여 최종 자동차세 금액이 확정됨

5) 벤츠 E300 출시가는 7,510~8,110만원, 현대차 쏘나타 출시가는 2,219~2,919만원

6) 현대차 코나EV(4,650~4,850만원)·아이오닉EV(3,915~4,215만원), 기아차 쏘울EV(4,600~4,800만원)·니로EV(4,780~4,980만원), BMW i3(6,000~6,560만원), 테슬라 모델X(1억8,940만원) 등

- 자동차세의 부과 목적이 도로사용에 따른 파손,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非내연기관 차량 역시 똑같이 도로를 이용하고, 충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감안해야 함

○ 또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신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율은 cc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차량 가격이나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고정된 세액 부과
- 따라서 물가 상승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실질세액은 감소하는 효과 초래

4. 자동차 세제의 개편방향

□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진척이 없는 정치권

○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6년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는 미지수

-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차량가액 기준 자동차세 변경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힘

7) 「지방세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 새 부과기준은 차량 가격은 물론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야

○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은 세수중립적 입장에서 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되, 여러 과세기준(배기량, 연비, CO²배출량 등)을 복합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와 공채매입 등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고급대형차의 사치세적 성격과 환경오염, 도로파손, 교통 혼잡 등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억제기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 자동차 세제 간소화나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적 환경오염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이용단계 세제인 주행세(motor fuel tax) 등의 비중 강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자동차 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의 역할과 각종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국토 자원과 점증하는 대기오염 및 심각한 교통 혼잡 등의 정책과제를 단순히 차량 이용단계의 유류세나 통행세의 강화만으로 억제하기에는 어려우며, 차량 보유와 관련된 세제의 보완적 기능이 요구됨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차량 연료의 소비뿐만 아니라 차량 보유에 대해서도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 배기량, 무게, 연비, CO² 배출량, 사용연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시에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의 역할 조정을 통해 사치적 성격의 고급대형차에 대한 과세를 상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도 더욱 강화 필요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 02-6288-0527]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9-02)

편집위원회 위원장 : 노명순 편집위원 : 김창배·이윤식·최진웅 간사 : 이윤경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 2019년 01월 24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